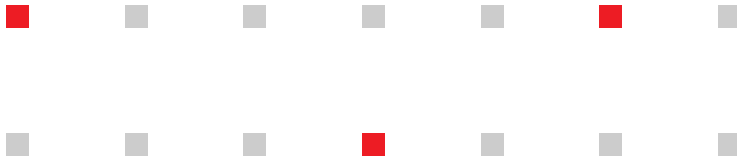




Briefing

20110530 vol.41

최근 고용동향으로 본 일자리 정책 방향



연구진 이 강 진 연구위원 kjl@jthink.kr
김 민 경 연구원 mkkim@jthink.kr
김 대 명 연구원 kamchopro@jthink.kr

1. 문제제기
2. 최근 전북 고용의 특징
3. 전북 고용 현황 진단 및 정책 제언
4. 참고자료



이슈브리핑 Issue Briefing

전북발전연구원 이슈브리핑 2011년 5월 30일 vol.41

발행처: 전북발전연구원 | 발행인: 원도연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57(중앙동 4가 1) TEL : 063)280-7100 FAX : 063)286-9206

※이슈브리핑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 (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C O N T E N T S

최근 고용동향으로 본 일자리 정책 방향

- 1. 문제제기 4
- 2. 최근 전북 고용의 특징 4
 - 1) 고용 일반 현황 4
 - 2) 최근 산업별 직업별 취업자 현황 5
- 3. 전북 고용 현황 진단 및 정책 제언 12
 - 1) 전북 고용 현황 진단 12
 - 2) 정책 제언 14
- 4. 참고자료 19

최근 고용동향으로 본 일자리 정책 방향

요약

- ① 전라북도는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도청의 조직을 일자리에 맞추어 개편할 정도로 일자리창출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기업유치 및 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 등의 일자리창출 정책분야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취업자 수는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증가한 실업률(2011년 1사분기 기준)에 대해 전라북도 일자리창출과 소멸 현황을 파악하여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고민 할 필요가 있음
- ③ 최근 고용의 특징 중의 하나는 수출입, GRDP, 생산, 매출 등에서 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고용절약형 성장이 뚜렷한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일자리창출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임
- ④ 최근 전라북도의 고용을 보면 제조업 분야에서는 일자리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음
- ⑤ 제조업은 당분간 업황의 호조세와 더불어 취업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서비스산업은 업황의 저조와 향후 경기전망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지역 서비스업 회복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적극적인 서비스 분야의 육성정책이 필요함
- ⑥ 이와 더불어 제조업 분야의 고용흡수력 약화는 제조업에서 일자리창출이 어려워진다는 의미이므로 제조업 위주의 일자리창출 정책에서 고용흡수력이 높은 서비스 분야에서의 육성을 통한 고용창출 노력이 필요함
- ⑦ 향후, 전라북도 일자리 정책 방향에 대한 고민은 소멸되는 일자리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어느 분야의 서비스 산업을 어떻게 육성하여 일자리창출을 극대화 할 것인가?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보다 적극적인 일자리창출 정책은 무엇인가? 등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임

1. 문제 제기

- ▶ 전라북도는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도청의 조직을 일자리에 맞추어 개편할 정도로 일자리창출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음
- ▶ 전북 고용의 전형적이 패턴을 보면 농업부문 일자리의 계절적인 영향으로 인한 불안정성, 제조업 일자리의 정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위주의 서비스업의 취업구조의 열악함으로 요약이 될 수 있었으나 최근에 들어와 일자리의 정형적인 패턴에서 변화하기 시작하였음
- ▶ 제조업 분야에서는 지속적인 부분별 맞춤형 일자리창출 정책과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 정책이 부분적으로 성공하여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 한편, 서비스분야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도구가 명확하지 않고 중점적인 정책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어 최근에 들어와서 이 분야에서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 ▶ 전북의 총체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일자리는 최근 증가하였으나, 전라북도 총량적인 차원에서 일자리 수는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전라북도 일자리 정책의 한계와 새로운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음
- ▶ 또한 최근에 들어와서 실업률이 급격히 상승한 것은 신중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으며 실업의 상승 요인과 업종별 취업자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일자리 정책 방향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2. 최근 전북 고용의 특징

1) 고용 일반 현황

- ▶ 전라북도의 경제활동인구는 15세이상 인구의 57.8%인 82만 8천명이며 경제활동참가율은 부산, 강원, 광주 다음으로 낮고(2011년 3월 기준) 이 중 취업자는 80만 6천명으로 실업률은 2.7%로 제주, 전남, 충북 다음으로 낮음
- ▶ 취업자 가운데 청년층은 8만 7천명이며 청년층 취업자의 비율이 전남 다음으로 낮은 상태로서 전체적인 고용의 노령화가 타 지역 보다 급속히 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음
- ▶ 한편, 고용률은 56.2%로 부산, 강원, 광주, 대구 다음으로 낮은 상태로 광역시를 제외하면 강원 다음으로 주어진 가용인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 전반적인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됨
- ▶ 이러한 전반적인 어려운 고용상황은 최근의 상황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고착화된 부분이 많으며 경제구조의 취약성, 사회문화적인 인프라의 부족 등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음

〈표 1〉 경제활동인구

(단위 : 천명, %, 기준 : 2011년 3월)

	15세이상 인구	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취업자	청년층	고용률	여성	실업률
전 국	40,918	24,918	60.9	23,846	3,793	58.3	47.0	4.3
서 울	8,409	5,266	62.6	4,980	942	59.2	49.5	5.4
부 산	2,900	1,618	55.8	1,549	207	53.4	42.7	4.3
대 구	2,058	1,206	58.6	1,155	175	56.1	46.4	4.2
인 천	2,247	1,405	62.5	1,317	233	58.6	46.0	6.3
광 주	1,179	678	57.5	650	108	55.2	46.3	4.1
대 전	1,241	744	59.9	709	119	57.1	45.7	4.7
울 산	920	555	60.4	532	85	57.8	43.6	4.3
경 기	9,780	6,004	61.4	5,733	1,007	58.6	45.4	4.5
강 원	1,197	666	55.7	644	83	53.8	43.3	3.4
충 북	1,246	752	60.4	733	105	58.8	49.2	2.5
충 남	1,632	1,012	62.0	982	149	60.2	47.4	3.0
전 북	1,434	828	57.8	806	87	56.2	44.2	2.7
전 남	1,428	893	62.5	873	84	61.1	50.6	2.3
경 북	2,188	1,376	62.9	1,325	161	60.5	50.4	3.7
경 남	2,619	1,626	62.1	1,576	209	60.2	49.2	3.1
제 주	441	289	65.5	284	40	64.3	56.4	1.8

자료 :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참고 : 청년층은 15~29세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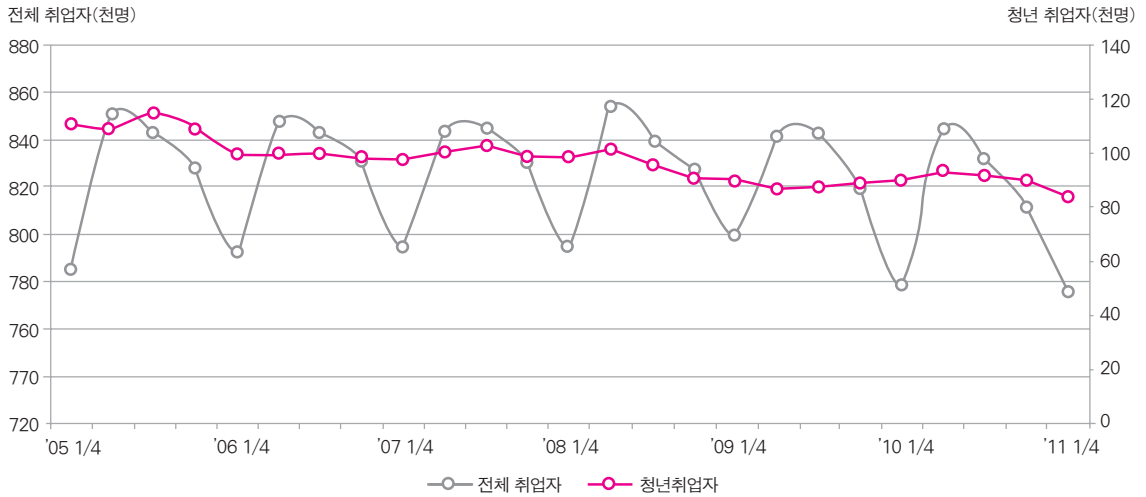
2) 최근 취업자 현황

- ▶ 지역의 총 일자리는 지역에서 취업을 한 취업자의 수를 통해 평가를 해야 하며 지역의 일자리가 어떻게, 어느 분야에서 창출이 되었는지에 대한 현황을 이해하여야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음
- ▶ 전북의 '11년 1사분기 경제활동인구(80만 2천명)는 전년동기비 변함이 없으나, 취업자(77만 6천명)는 3천명 감소, 고용률(54.1%)은 0.6%p 감소, 실업률(3.3%)은 0.5%p 증가로 실업자(2만 6천명)가 4천명 증가하여 고용지표가 악화됨
- ▶ 이러한 고용지표의 악화에 따라 일자리창출 방향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였으나, 고용은 계절적요인이 강하고 특히 1사분기에는 일반적으로 가장 낮은 고용실적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분석하여야 함

전체적인 취업자 수는 감소 추세, 청년 취업자 수 감소는 전국적 현상

- ▶ 전북의 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청년층의 감소폭이 전체적인 감소폭 보다 크게 나타나 결국 청년층의 일자리창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 2000년 3사분기 16만 명의 청년 취업자 수가 2011년 1사분기 8만 4천명으로 큰 폭으로 줄어들어 청년층 인구의 감소와 함께 취업자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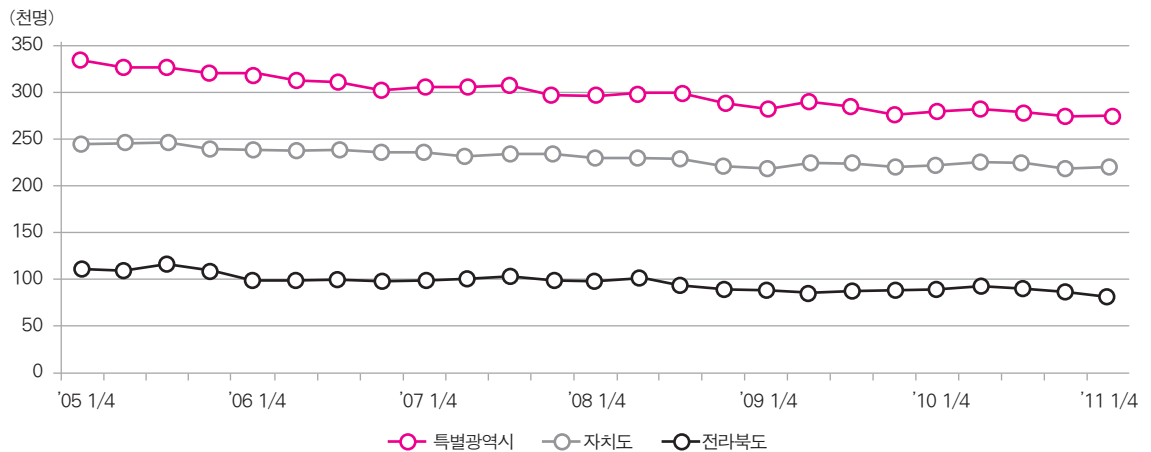
〈그림 1〉 전북의 취업자 수



자료: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월

- ▶ 전국적으로 고용이 없는 성장의 특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청년층의 실업은 전국적인 현상이며, 아래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별/광역시 경우에는 청년 취업자 수의 감소율이 더 크고 도의 경우에는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
- ▶ 전국과 비교하여 전북의 경우에는 청년 취업자 수가 절대적인 수에서 작은 것을 볼 수 있고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전국의 추세와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청년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타 지역보다도 청년 취업자 수의 증대 노력이 더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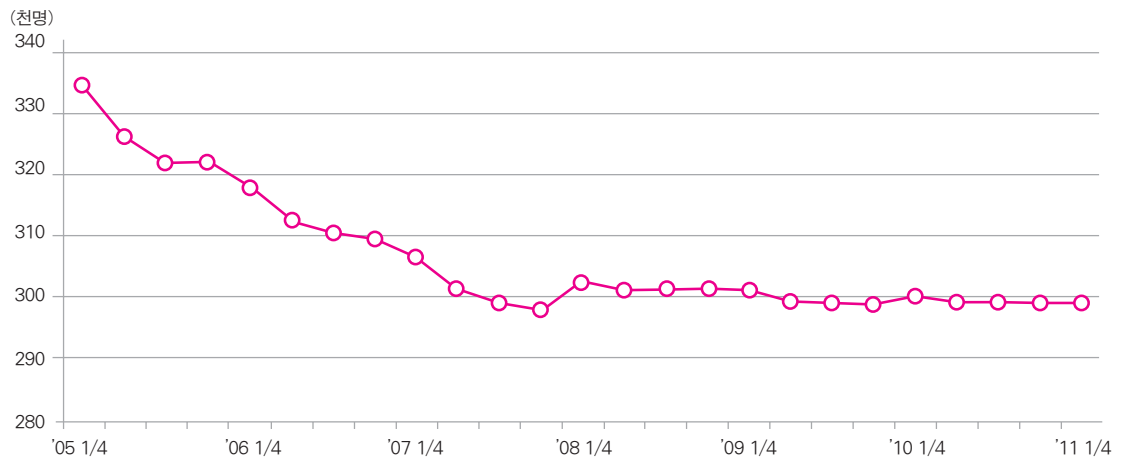
〈그림 2〉 청년 취업자 수 추이



자료: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월

- ▶ 한편, 전라북도의 청년층 인구는 지난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07년 하반기 이후부터 최근까지 30만 명 수준에서 수렴하고 있는 상황임
- ▶ 청년층의 인구는 향후 경쟁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청년층의 유입을 유도할 방안을 고민해야 하며, 현재 수준에서는 이러한 30만 명의 청년들에게 어떠한 일자리를 제공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함

〈그림 3〉 전북의 청년층 인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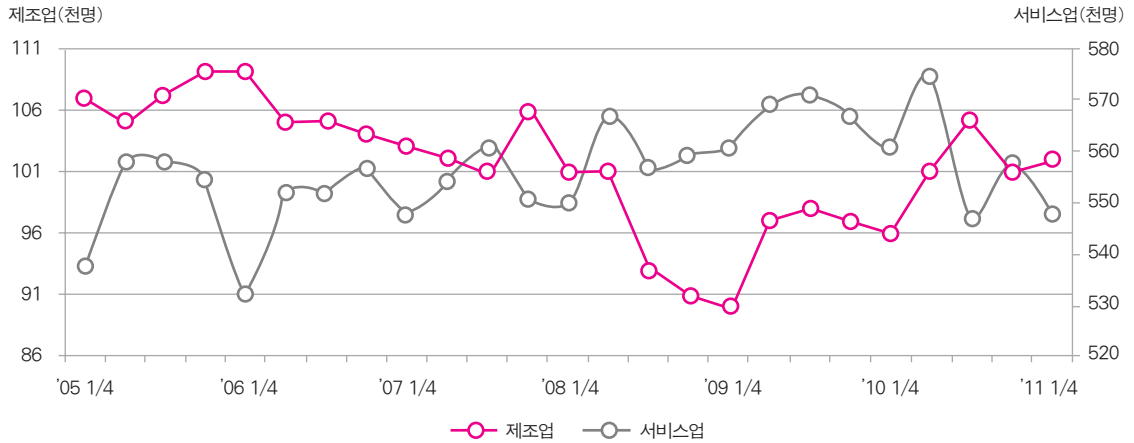


자료: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월

최근 일자리가 제조업분야 증가, 서비스업 분야 정체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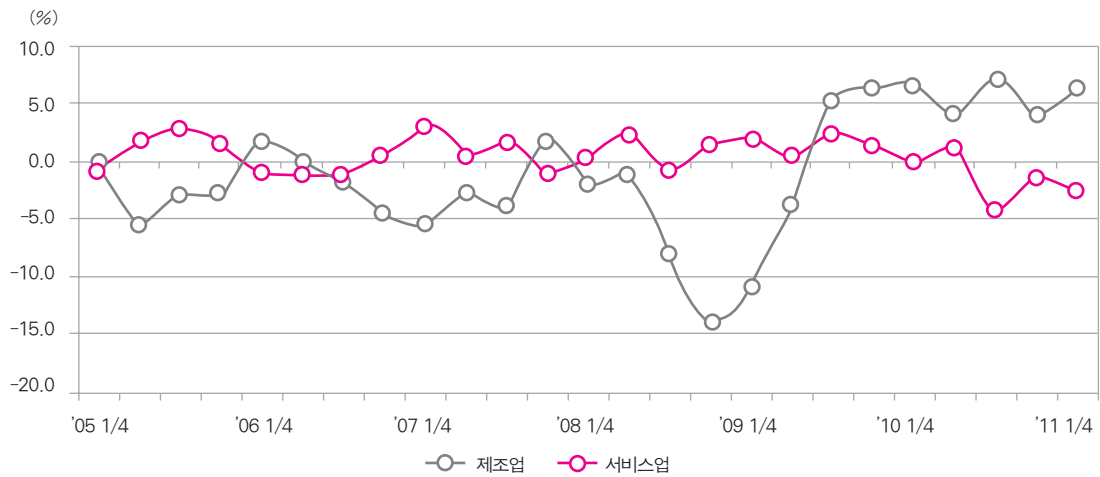
- ▶ 전체적인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에서 최근에 나타난 현상 중의 하나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의 성장률이 확연한 변화를 보인다는 것임
- ▶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년 1사분기를 저점으로 제조업의 고용은 지속적으로 늘어난 반면, 서비스업의 고용은 2010년 1사분기를 기점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산업별 취업자 수의 전년동기비를 보면 2009년 2사분기 이후 제조업은 지속적인 증가, 서비스업은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다는 것임
- ▶ 전북의 2011년 1사분기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비 서비스업에서의 순 감소분 1만 3천명과 농림어업에서의 증가분 3천명, 그리고 제조업에서의 순 증가분 6천명으로 3천명이 순 감소하였고, 그로 인하여 실업률이 최근에 들어서 가장 높은 3%대(3.3%)를 기록하였음
- ▶ 위와 같이 제조업 취업사정은 호전된 반면, 서비스업 취업사정은 좋지 않아 업종별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음

〈그림 4〉 전북의 산업별 취업자 수



자료: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월

〈그림 5〉 전북의 산업별 취업자 수(전년동기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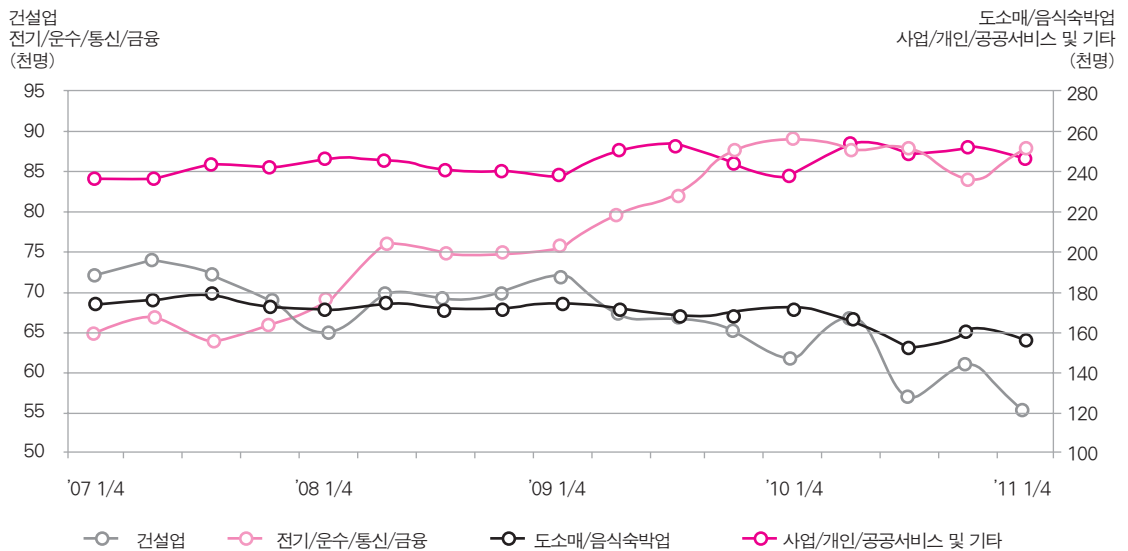
자료: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월

취약한 취업구조에 기인한 서비스업 일자리창출 어려움

- ▶ 2011년 1사분기 취업자의 변동 현황을 보면 제조업과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등에서 증가(전년동기비 각각 6.3%, 4.2%)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임
- ▶ 반면, 지역경기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건설업과 도·소매·숙박업에서 큰 폭으로(전년동기비 각각 11.3%, 8.7%) 하락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장기간 이어져 왔으나, 최근에 들어서 더 많은 취업자 수의 감소를 보이고 있음

- ▶ 전북 서비스업의 비중은 사업체 기준으로 3.8%, 종사자 기준으로 3.3%이나 생산자 서비스는 각각 2.8%, 2.3%로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일반서비스에 특화되어 있음
- ▶ 또한 기업의 규모에 대한 비중을 보면 대기업의 경우 서비스업은 사업체수 기준 2.1%, 종사자 기준 2.0%이며 생산자 서비스업은 각각 1.0%, 0.7%로 전국대비 열악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 ▶ 이러한 서비스업의 영세성, 저부가가치 특화로 인하여 도소매·음식숙박업과 같은 생계형 서비스업도 2007년 이후 지속적인 취업자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들어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 국제금융위기 이후에 건설기업의 부도로 침체된 업황이 개선되지 않고 이와 더불어 서비스업의 부진으로 지난 2년 동안 건설업 분야의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그림 6〉 전북의 서비스업별 취업자 수



자료: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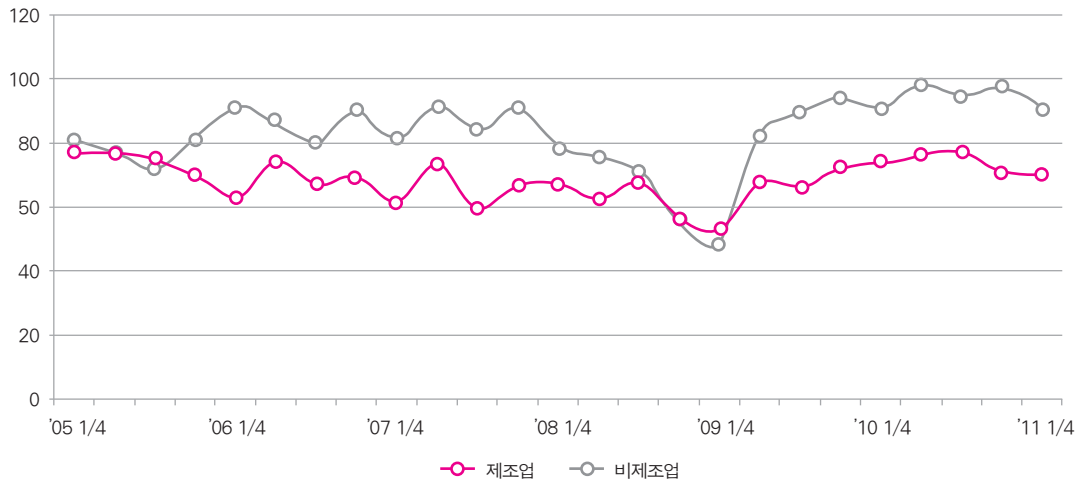
제조업의 강세, 서비스업의 약세는 지속될 전망

- ▶ 현재 상태의 제조업의 강세, 서비스업의 약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면 제조업 분야의 산업생산지수는 140.1로 전년동기비 15.1% 증가하여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수출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제조업 분야에서의 취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업황 BSI가 90이나 안정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음
- ▶ 그러므로 대외적인 변화요인과 물가상승이라는 약재가 있으나 수출 주도의 생산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제조업 분야의 취업자는 당분간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 반면, 비제조업 분야에서는 2011년 1사분기 업황 BSI가 70으로 저조하고 전년동기비 4p 하락하였고 소비자들의 현재 경기판단 CSI가 '10년 4사분기 96 → '11년 1사분기 84, 4월의 76으로 경기가 악화

되었다고 판단함

- ▶ 또한, 향후전망 CSI가 '10년 4사분기 106 → '11년 1사분기 94, 4월의 86으로 하락하여 향후 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어 비제조업 분야의 경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고 있어 앞으로의 경기가 더 위축될 것이며 현재 서비스업 부문에서는 업종 간 경쟁의 심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폐업이 증가하여 취업자 수가 2011년 1사분기 월평균 1만 3천명 감소하였으며 이는 2011년 전라북도 일자리창출 목표인 1만 1천명보다 더 큰 일자리 소멸임
- ▶ 이러한 추세로 인하여 제조업의 호황으로 인한 일자리의 증가, 서비스업의 업황 악화로 인한 이 분야에서의 일자리의 감소가 지속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그림 7〉 전북의 제조업 및 비제조업 업황 BSI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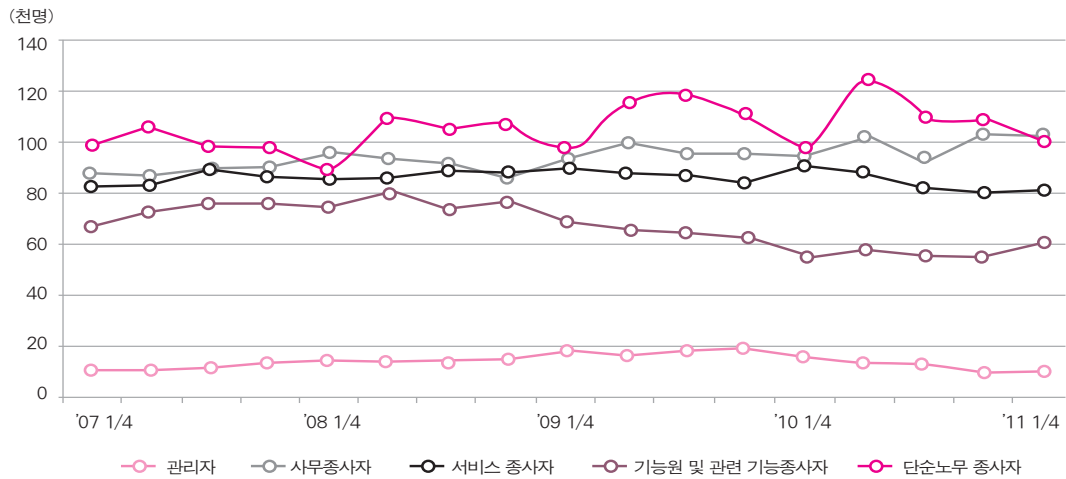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전북본부, 기업경기조사, 각 월

업종별 취업자의 질적 수준은 개선되는 상황

- ▶ 2011년 1사분기 취업자의 직업별 구성을 보면 전년동기비 사무직(7천명),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5천명), 단순노무 종사자(3천명)는 증가한 반면 관리자(6천명), 서비스 종사자(9천명)는 감소함
- ▶ 직업별 취업자를 보면 직업별로 가장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부분은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수이며 2008년 초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을 보여 고점대비 2만 명가량 감소하였음
- ▶ 한편, 사무 종사자 수는 2006년 중반 이후 계절적인 변화는 있으나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 종사자는 2004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최근 4분기 간 큰 하락세를 보임

- ▶ 단순노무 종사자는 계절적·경기적 변화가 심한 편으로 1사분기가 가장 적고 2사분기가 가장 많은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10만 명 수준에서 계절적·경기적 요인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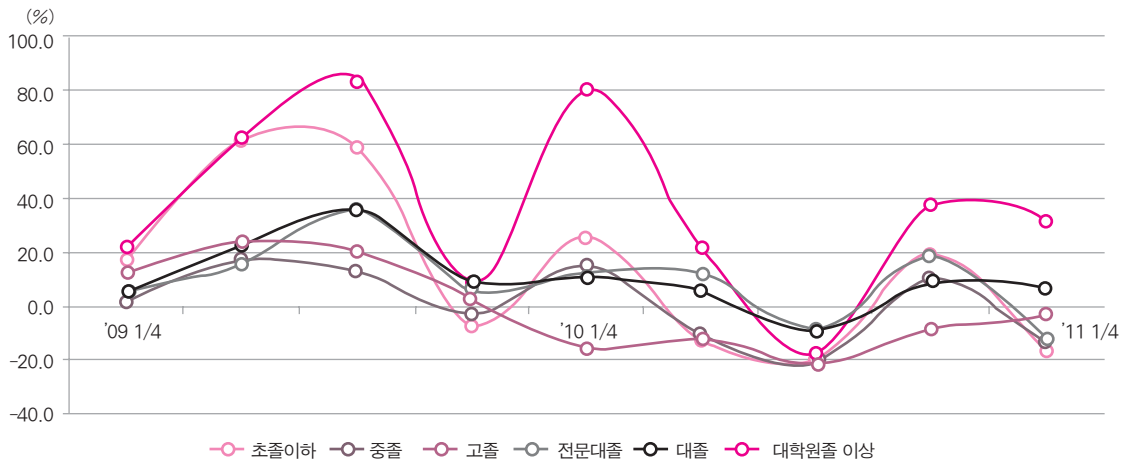
〈그림 8〉 전국의 직업별 취업자 수



자료: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월

- ▶ 최근 2011년 1사분기 워크넷의 데이터에서 취업자의 학력을 보면 전년동기비 초졸 이하, 중졸, 고졸과 전문대졸은 줄어든 반면, 전체 취업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졸과 대학원졸의 취업이 늘어났음
- ▶ 또한, 취업자의 증가가 화학 관련직, 경비 및 청소 관련직이 증가한 반면 재료 관련직, 단순생산직, 농림어업 관련직이 크게 줄어들어 구인구직이 지역의 산업과 연계성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음

〈그림 9〉 워크넷의 학력별 취업자(전년동기비)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구인구직통계, 각 월

3. 전북 고용 현황 진단 및 정책 제언

1) 전북 고용 현황 진단

(1) 고용 없는 성장, 보다 강력한 일자리 정책 필요

- ▶ 전라북도에서도 수출입, GRDP, 생산, 매출 등에서 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고용 없는 성장이 뚜렷한 추세를 보임
- ▶ 전북이 지난 10년 동안 수출 면에서 2,881백만 달러에서 10,505백만 달러로 증가, 수입은 1,501백만 달러에서 4,134백만 달러로 증가, 생산지수가 77.1에서 134.5로, 대형소매점의 매출이 3,967억 원에서 1조 1,493억 원으로 증가하여 경제가 큰 폭으로 성장을 하였지만 취업자 수에서 84만 3천명에서 81만 7천명으로 오히려 감소하였음
- ▶ 이러한 고용 없는 성장은 심지어는 고용절약형 성장, 전북만의 현상은 아니며 전국,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고용절약적인 투자가 주를 이루므로 지역의 기업이 투자를 한다고 해서 고용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아닐 수 있음
- ▶ 그러므로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본 전략이 바뀌어야 하며 노동절약형 투자 보다는 고용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을 하는 것이 일자리창출 방향으로 정착되어야 함

(2) 최근 제조업 분야일자리 정책의 효과 가시화

- ▶ 최근 제조업에 대한 일자리는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제조업의 일자리를 뒷받침할 생산, 출하, 재고, 수출등과 같은 지표가 지속적으로 호전되고 있어 당분간 제조업 부문에서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창출될 것으로 보임
- ▶ 전라북도는 기업유치 뿐 아니라 공공 차원에서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서비스업 보다는 제조업 위주의 일자리창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업 차원에서의 일자리창출이 주된 영역임
- ▶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전라북도는 다양한 일자리창출 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나, 전라북도의 일자리창출 정책은 70% 정도가 제조업 분야이며 나머지가 서비스와 농업 분야로 지역산업의 일자리 구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창출 정책으로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는 최근 증가하고 있으며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되는 역할을 하고 있음

〈표 2〉 전라북도 일자리창출 성과 지표

부문	시책명	민선5기목표	2011년 목표	발표지표	발표 주기
	합계	44,000명	11,000명		
기업유치	• 기업·투자유치	400개 기업 24,000명	100개 기업 6,000명	유치기업 수 고용예정 인원 실체용인원수	분기 고용동향 특별 조사에 근거
창업	• 사회적기업 육성	1,400명	350명	창업기업수 고용인원 수	분기
	• 희망창업	1,200명	300명		
취업지원	• 일자리종합지원센터	2,000명	500명	취업상담수 취업알선수	분기 워크넷 D/B 활용
	• 청년취업2000	2,000명 (1,600명, 취업률 80%)	400명	참여기업수 취업인원수	
	• 기업채용 종합지원	1,000명	250명	지원기업수 취업인원수	
인력양성	• 산학관커플링 • 취업전환교육 • 기업주문식 인력양성 • 숨은 일자리 발굴 • 맞춤형 기술인력지원	3,600명 (2,520명, 취업률 70%)	630명	교육인원수 교육수료수 취업인원수	분기
지역특화	• 여성·노인·장애인·다문화	3,240명	810명	추진실적 취업인원수	분기
	• 환경·녹색	520명	130명		
	• 문화·체육·관광	2,160명	540명		
	• 농수산물	1,600명	400명		
	• 건설·소방	2,800명	7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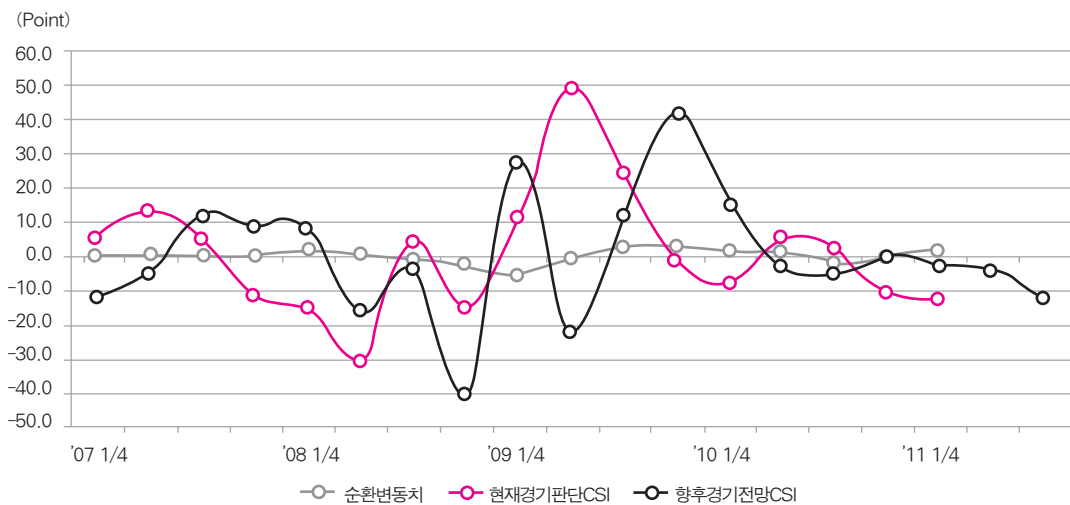
자료: 전라북도 내부자료

(3) 서비스업의 일자리 회복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임

- ▶ 제조업은 당분간 호조세를 유지하고 이 분야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서비스업의 고용 회복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임
- ▶ 향후, 서비스업의 방향을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관심을 가지고 보는 지표는 소비자들의 경기전망에서의 소비측면임. 소비자들의 경기전망은 향후 소비측면에서 경기를 예측하므로 이는 제조업 보다는 서비스업에 더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이유로 최근 향후 소비측면의 경기전망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지역의 서비스업의 업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서비스업의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것임

- ▶ 서비스 산업은 경기에 민감하고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은 실질적으로 서비스 산업의 긍정적인 투자 및 고용을 유발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므로 경기전망에 대해 주시할 필요가 있음
- ▶ 아래 그림에서는 제조업 위주의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소비자들의 경기판단 및 경기전망에 대한 CSI가 표시되어 있으며 현재경기판단과 향후경기전망은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는 반면 순환변동치는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으나 서비스업의 업황을 본다면 CSI가 보다 설명력이 있을 것으로 보임

〈그림 10〉 전북의 순환변동치와 현재 및 향후 경기 CSI(전기대비)



자료: 한국은행 전북본부, 소비자동향조사, 각 월 & 전라북도, 경기동행지수

2) 정책 제언

(1)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연계강화

- ▶ 제조업의 지속적인 호황이 서비스업으로 연계되지 않아 제조업 호황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 특히 생계형 서비스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 ▶ 제조업의 호황이 지역의 서비스업으로 연계가 되지 않는다면 지역의 서비스 산업은 회복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며 이는 추가적인 인구유출로 이어질 것임
- ▶ 이를 위해 기업지원서비스업체의 육성을 통한 서비스업의 활성화, 생계형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종 간 연계강화, 업종간 접근성 확보를 위한 지원 등의 노력과 함께 산업적으로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의 활용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

(2) 일자리 유지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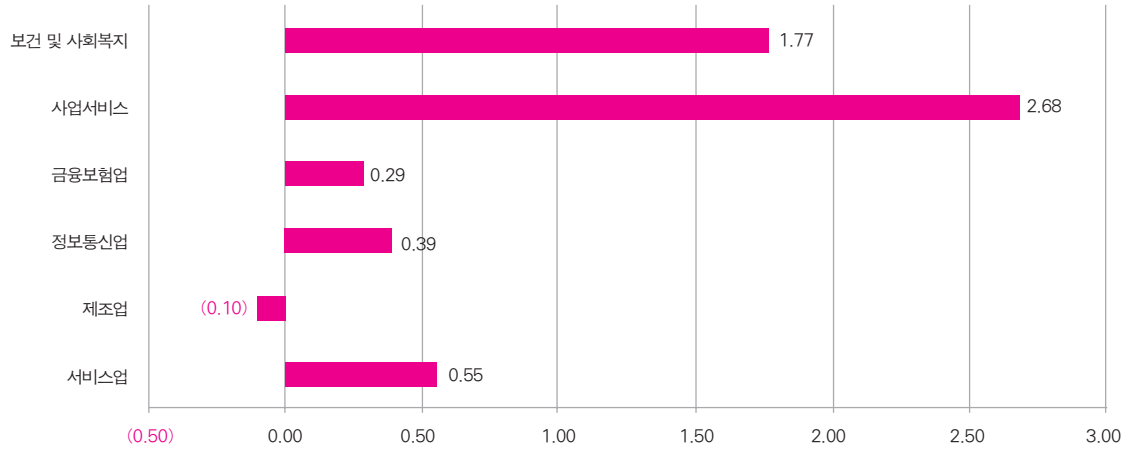
- ▶ 도 또는 시군의 일자리 정책의 평가가 일자리 정책을 통한 일자리의 창출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일자리가 얼마나 유지되고 창출되었는가를 총체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함
- ▶ 전라북도의 2011년도 목표인 11,000명은 일자리창출 성과 보다는 실적에 가까운 측정이며 일반 도민들은 11,000명이 창출이 되었는지 관심을 가지는 것 보다는 전라북도의 전체 일자리가 얼마나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하고 싶을 것임
- ▶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더라도 일자리 소멸이 많으면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질 것이므로 일자리 유지정책 또한 병행하여 실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기업들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일자리 유지가 되지 않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거시적인 조기경보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일자리창출을 위한 전략서비스업 육성

- ▶ 전라북도는 최근 제조업의 일자리 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는 지속적인 기업유치를 통한 제조업 육성정책의 결과로 볼 수 있으나, 고용 없는 성장, 일자리 창출력의 제조업의 상대적 저하(취업 유발계수: 제조업 9.2명, 서비스업 18.1명, 건설업 16.8명), 제조업의 고용절약형 투자패턴 등으로 제조업의 일자리창출은 한계가 있으므로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 현재 전라북도는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은 수립하고 있는 상황이나, 구체적인 실행단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서비스 산업을 통한 일자리의 창출은 서비스업 분야의 전략적 선정을 통한 산업육성이 필요함
- ▶ 전략서비스 산업의 지정을 통한 전략서비스 산업의 육성은 제조업의 육성과는 차이점이 많이 존재하나, 서비스 산업의 기반이 열악한 전라북도에서 취할 수 있는 서비스 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가장 좋은 대안 중 하나임
- ▶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서비스업의¹⁾ 고용탄성치는 2.68로 제조업의 -0.10, 서비스업의 0.55, 정보통신의 0.39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므로 일자리창출을 위한 전략적인 선택을 할 때 물론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나, 일자리창출 면에서 단연 돋보이는 사업서비스업을 선택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 사업서비스업은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72), 연구개발업 (7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4), 사업지원 서비스업(75)로 구분됨

〈그림 11〉 산업 및 업종별 고용수용력(2004~2010년 중)



자료: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년

참고: 고용탄성치(취업증가율/GRDP증가율)가 높을수록 산업 성장에 비해 고용흡수력이 높음을 의미

- ➔ 그러나 일자리창출 정책이 지역의 서비스 산업 전반에 미치는 것은 어려울 것이며 많은 부분이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결국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가 되어야 서비스 산업은 활성화가 되므로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정책 주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임

(4) 생계형 서비스 지원방안 모색해야

- ➔ 최근의 취업자 수의 하락, 실업률의 급상승은 생계형 서비스의 일자리 소멸로 기인한 것이므로 생계형 서비스를 위한 포괄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보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 인구 천명당 생계형 서비스 사업체수를 보면 전북은 39.1개로 전국에 비해 약간 많은 편이며 세부 업종별로 보면 전북과 전국 공통으로 소매업이 가장 많고(각각 14.9개, 12.3개) 가운데 전북이 2.6개 더 많은 반면 음식점업은 전북이 8.1개로 전국의 8.6개에 비해 약간 적은 것으로 나타남
- ➔ 한편, 전국의 종사자와 비교해 볼 때 전북의 소매업, 음식점업과 같은 재화 연계형 서비스업의 비율이(28.5%)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순수부가가치창출형도(5.4%)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이러한 수치는 OECD 선진국과 비교할 때 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소매업의 경우는 미국에 비해 3.9배 많고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7배 많아 생계형 서비스업에 대한 높은 비중을 보임
- ➔ 생계형 서비스가 낮은 진입장벽과 낮은 마진율로 인하여 고용의 유지가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나 제조업 보다는 고용흡수력이 크고 중년층과 여성층 등의 고용이 많아 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흡수력이 높으므로 생계형 서비스의 견실화를 위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표 3〉 인구 천명당 사업체수, 생계형 서비스 종사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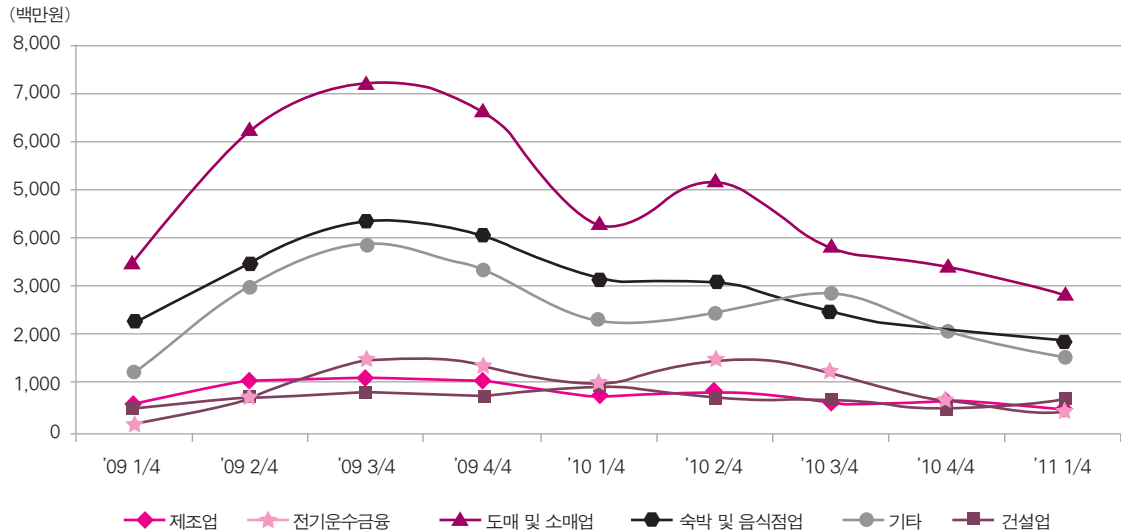
	인구 천명당 사업체수		종사자 비율		
	전국	전북	전국	전북	전북/전국
서비스업	57.6	58.8	100.0	100.0	3.3
생계형 서비스 산업	37.5	39.1	35.8	39.4	3.6
재화판매 연계형	24.0	25.9	25.4	28.5	3.7
(소매업)	12.3	14.9	12.2	14.9	4.0
(음식점업)	8.5	8.1	9.9	10.2	3.4
(오락장운영업)	1.1	0.9	0.9	0.8	3.3
(숙박업)	1.0	1.0	1.3	1.3	3.5
(기타운동시설운영업)	0.6	0.5	0.6	0.6	3.0
(개인및가정용품 임대업)	0.2	0.2	0.2	0.2	3.6
(자동차부품및부속품판매업)	0.3	0.3	0.3	0.4	3.5
(이륜자동차및부속품판매업)	0.0	0.1	0.0	0.0	4.9
재화 중개형	7.8	6.9	5.5	5.5	3.3
(부정기여객육상운송업)	3.3	3.2	2.5	2.6	3.3
(도로화물운송업)	3.0	2.8	1.9	2.3	4.0
(부동산중개업)	1.6	0.9	1.1	0.6	1.8
순수 부가가치 창출형	5.6	6.2	4.9	5.4	3.6
(수리업)	1.9	2.3	1.9	2.2	3.8
(기타 서비스업)	3.8	3.9	3.0	3.2	3.5

자료: KOSIS, 전국사업체조사, 2009년

- ▶ 한편,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국민경제적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정부 보조금이 한 단위 증가할 때 매출액은 12.2배, 생산액은 23.6배, 부가가치는 9.8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1억 원 보조금 지출에 대해 42.4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김흥기, 2009)
- ▶ 이러한 정책 효과에도 불구하고 생계형 서비스의 지원은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며 민간부분에서 담당해야 할 부분이 대부분이나 최근에 신용도, 경영상황의 투명성 부족,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 지급 등으로 소상공인의 자금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직접지원이 아닌 간접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전라북도의 소상공인 지원이 건수와 금액 면에서 모두 2009년 3사분기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생계형 서비스 분야의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서비스 산업의 육성 뿐 아니라 사회안전망 차원에서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함

- ▶ 소상공인 지원 자금의 확대 방안,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접근성 제고방안 등의 생계형 서비스의 지원 방안이 시장을 교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그림 12〉 전북의 업종별 소상공인 지원 금액



자료: 전북신용보증재단 내부자료

(5) 일자리창출을 제도화

- ▶ 일자리창출이 하나의 정책에서 벗어나 일자리창출을 제도화 할 필요가 있음
- ▶ 하나의 정책으로서의 일자리창출은 집행자의 실적(성과가 아닌)에 초점이 맞추어 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효과성이 의문 시 되며 이는 지속적인 일자리 보다는 일자리 정책이 시행이 될 시점에 만 관리가 되고 사후에는 일자리가 유지되는지 소멸이 되었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 실질적인 일자리창출로 이어지기 힘든 상황임
- ▶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정책의 기초를 일자리창출에 맞추고 기업지원 및 정책을 입안 할 때 일자리 효과를 사전에 측정하여 이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는 일자리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임

4. 참고자료

- 김흥기, 2009,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성과분석 및 효과성 증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남대학교
- 전라북도, 내부자료
- 전라북도, 경기동행지수
- 전북신용보증재단, 내부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구인구직통계, 각 월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년
- 한국은행 전북본부, 기업경기조사, 각 월
- 한국은행 전북본부, 소비자동향조사, 각 월
-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월
- KOSIS, 전국사업체조사, 2009년



전북발전연구원

560-014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57(중양동 4가 1번지)
Tel. 063-280-7100 Fax. 063-286-9206
www.jthink.kr